

# 주택 절반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

20년 넘도록 유지된 도내 주택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도내 대다수의 주택이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의 20년 이상된 주택은 29만974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27만7,684호보다 4.8% 늘어났다. 같은 해 도내 전체 주택 57만5,967호의 50.5%에 달하는 수치다. 두 집당 한 집이 20년의 세월을 넘긴 노후 주택인 셈이다. 원주지역은 4만6,645호를 기록하며 도내 17개 시·군 중 최다 노후 주택 지역에 올랐다.

지난해 4.8% 늘어 29만974호 기록  
원주 가장 많고 강릉·춘천 뒤이어  
50년 이상된 건물도 4만3,196호

강릉과 춘천은 각각 4만3,789호, 4만1,743호 순였다. 노후 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30년 미만 주택이 15만7,689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려 50년 이상된 주택은 4만3,196호로 집계됐다. 전국 단위로 전남은 20년 이상이 60.5%에 육박하며

전국 최대 노후 주택 비율을 가졌다.

늘어나는 노후 주택과 더불어 도내 전체 주택 수도 상승세를 그렸다. 2015년 57만호에 그치던 주택 수는 지난해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년째 이어지는 도내 부동산 투자 증대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살펴볼 때 아파트가 30만1,000호(52.2%)로 가장 많았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23만2,000호(40.3%), 2만1,000호(3.6%)다. 다세대주택과 비거주용 건물내주택은 1만1,000호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윤종현기자 jjong@

# 경제성 부실·정부 외면 ‘제2경춘국도’ 난항

도, SOC 우선사업으로 선정  
정부 계획 미반영 추진 혼선  
사업 타당성조사 0.74산출  
“우선순위 재검토” 비판 일어

속보=강원도가 SOC사업 우선 순위로 정한 제2경춘국도 건설(본지 8월30일자 1·3면)이 정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지난해 8월 고시됐으며 계획에 포함된 건설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된다. 5개년 계획은 경제성 분석(B/C)뿐만 아니라 안전성·지역나후도·정책성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또 제2경춘국도는 원주국도관리청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 0.74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B/C값이 1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도가 사업 추진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 준비와 검증 없이 도지휘부 회의만을 통해 제2경춘국도를 SOC사업



평창 홍보관 방문한 한·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오찬을 마치고 극동 거리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을 방문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순위로 선정,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 제2경춘국도 사업을 국회 예산반영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SOC예산 감축 기조 속에 경제적 타

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 정치권은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작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정치권, 유관기관 등과 협의없이 결정된 SOC사업 우선 순위 조정회의를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최근 최문순 지사를 만나 “SOC 사업 우선 순위 선정은 강원도 미래 대비 차원의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천~삼척 ITX 등 철도망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은

## 도의회, 주요SOC·올림픽 사후 대책 마련 촉구

기획위·경제건설위 건의안 채택  
2차 추경심사 줄줄이 예산 삭감

강원도의회가 강원도 주요 SOC사업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대책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장세국)는 6일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정책 반영 건의문'을 채택, 강원도의 시급한 SOC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신설,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 제천~삼척 고속국도, 제천~삼척 ITX 건설을 들고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2018평창동계올

림픽 시설의 조속한 국가관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력 건의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최명서 의원 발의)', 동해·무호항 항만 활성화 를 위한 건의안(김규태 의원 발의)'도 채택했다.

제2차 추경심사에서는 삭감이 이어졌다.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대변인실 추경심사에서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예산(322억원)의 도비 매칭액(161억원) 중 111억원을 깎았다. 하지만 정부 추경에서 올림픽예산이 대거 편성된 점을 고려, 예결특위에서 부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사업 22억원을 전액, 경제건설위는 강원 일차리안심공제 지원예산(4억원)을 삭감했다. 김여진

### 새의자

박광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 도회장



박광표(53) 신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장은 “회원사를 위한 목표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역 확대, 강원도회 운영 활성화, 회원사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회장은 춘천출신으로 강원고와 한림성심대 건축과를 졸업했으며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1996년 1월부터 현재 춘천 광명건축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대운건설의 이사직무도 수행 중이다. 신관호

# “SOC투자 축소, 복지 후퇴 부메랑”

건협 '국민 삶의 질 높이는 인프라 예산 확대' 국회에 건의... 정치권도 공감대 확산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협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도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교통·주거·일자리 등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진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소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주영역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불가피하다”면서 “하도급업자,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등 건설 연관 산업까지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 건협 중소건설업육성추진위원회... 업계 현안 논의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위원장 이완수·㈜이세산업 대표)는 지난 5일 정례 회의를 갖고 중소건설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들이 종합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위주로 흐르는 데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또 건설재해를 막으려면 충분한 공사기간과 적정한 공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건설업 등록 기술자 보유기준 완화와 함께 서울시 등 지자체의 주계약 공동도급, 분리발주 확대 등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의 납부·사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민간공사의 산재보험료 등은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가 직접 납부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SOC의 본질은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다'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주요국보다 양적 질적으로 모두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김현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은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합쳐 고려한 한국의 국토체수당 도로보급률은 OECD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추락하는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한국공학한림원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해 토목·건축·교통·도시를 대표하는 4대 학회의 입장을 담아 국토부장·차관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김태홍기자 hth@kci.co.kr

건설공제조합 7415개사 정기 신용평가

A·B등급 우수업체 35.7%로 늘어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종합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올해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해 총 7415개사의 등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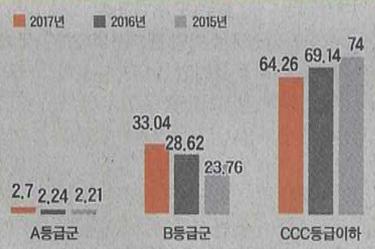
조합 신용평가는 매년 4월1일부터 실시하며, 신용등급은 조합과의 보증 및 용자거래 수수료율·거래한도 등을 정하는데 쓰인다.

올해 신용평가에선 평가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신용등급 상승업체가 늘었다.

A등급(AAA, AA, A등급) 비율이 2.24%에서 2.7%로 증가했고, B등급(BBB, BB, B등급) 비율도 28.62%에서 33.04%로 늘었다. A·B등급을 합치면 30.9%에서 35.7%로 1년 새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CCC등급 이하(CCC, CC, C, D등급) 비율은 69.14%에서 64.26%로 감소했다.

조합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주택경기 호황에 따라 주택 업체를 중심으로 재무지표가 개선됐고 최근 1%대의 낮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최근 3년간 추이



은 부도율과 차입금 상환능력 개선, 대표자 신용도 평가방법 등 일부 평가지표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우량업체인 A등급 이상에서 부도업체가 한 곳도 없어 조합 신용평가모형의 부도 변별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신용등급 유효기간은 결산일로부터 1년6개월이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용등급 유효기간은 다음해 6월 말까지이며 신용상태 변동 시엔 신용평가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김태형기자 kth@

1면서 계속 = "SOC투자 축소, 복지 후퇴 부메랑"

건설관련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다음달 초에 'SOC 투자 확대'를 건의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SOC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선 오는 10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당 외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도 이에 동참할 것으

로 알려졌다. 토론회도 줄줄이 열린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말 SOC 투자 축소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 의원은 지난 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SOC사업비 축소는 총사업비 증가를 불러오고 지역경제 타격과 일자리 감소 등 예상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오는 11월 초 SOC 예산 확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일자리 평가 확대' 건설업계 반응

"SOC예산 깎아 일감 줄여놓고 정책은 엇박자 인력채용, 기업 상황따라 자율적 운영 맡겨야"

건설업계가 조달청이 6일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정책' 지원 계획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달청이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 내용은 공공조달에 일자리 관련 평가 비중을 늘려, 건설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방향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비중에 따라 입찰대가·감점 부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감점 도입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나 삭감해 건설사 일감을 대폭 줄여 놓고, 정작 건설사엔 신규 인력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8·2대책으로 주택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된 데다,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깎으면서 향후 건설경기 침체는 뻔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거나 구조조정 위기에 처하면 기존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

로 전환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건설업계는 인력 채용 결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시장역시 수요와 공급 원리에 기초한 시장경제 기본질서에 따라야 하며, 공공기관이 이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산업·기업마다 사업환경, 내부 인력현황, 경영전략 등이 모두 다르다. 그런 만큼 산업과 기업 특성에 맞게 결정할 사안"이라며 "특히 건설산업은 공사종류, 공사 지역, 건설경기 불안정성 등에 따라 확일적 고용형태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용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별점을 부과하는 것은 징벌·강제성을 띠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고용개선 조치(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일정 비율 유지)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입찰 때 감점을 주는 것도 남성 고용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이다. 한상준기자